

부문별 주요동향 (5.21 ~ 6.20)

1. 대내경제	53
평양국제상품전 개최	53
월간 「조국」, “북, 생필품 생산 품목 및 양 확대”	5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개인현금 유통 적절히 통제해야”	54
『워싱턴포스트』, “북, 경제개혁 예상보다 빨라”	55
북,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하위규정 발표	55
김정일 국방위원장, 구성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	56
한은, 북 경제성장률 발표	57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기업소의 창발성 발양 강조	58
2. 농업 및 식량	59
WFP 긴급보고서, “북, 100만명 이상에 대한 식량배급 중단”	59
켈리 차관보, “미 대북지원 식량 용도 면밀 검토 중”	59
일 신문, “평양 통일거리시장 곡물가격 급등”	60
3. 대외경제	60
중국 회사, 올해 4개월간 북한에 TV 2만여대 수출	60
북한 2003년 대외무역, 최근 10년내 최대	61
북, 1/4분기 대남·대일 교역 축소	61
북 시찰단, 상하이-선전 특구 방문	62
평양주재 외국인에 휴대전화 허용	62
일, ‘북 선박 입항금지법안’ 가결	6
북, 대중 원자재 수출 급증	63
EU, 대북의료원조 910만유로 규모 승인	64
평양-스위스 제약합영회사 조업	64
주한 EU대사, “EU기업 개성공단 참여 어려울 것”	64
북, 중국과 나노기술 협력 추진	65
북, 중국 개인에도 투자 권유	65
북, 개도국간 경제협력 강조	66

평양-단둥 국제여객버스 운행 시작	66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66
북, 남한에 서해유전 개발 요청	66
통일부, “금강산 관광 3월부터 손익분기점 넘어”	67
남북한 등 6개국 대학, IT 교류협력 세미나 추진	67
인천시, 개성공단에 인천기업 전용단지 추진	68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68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마스터플랜 제시	69
남북, 북 SOC 부족 공감, 해법에는 이견	69
통일부, 1~5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70
5.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	71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71
통일부 장관, “북일 관계 개선 기대”	72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책 합의	7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73
6. 북한·주변국가 관계	75
북일 정상회담 개최	75
북, 대리비아 UF6 판매 부인	75
미 민주당 케리 상원의원, “북한과 감군 및 통일 직접대화 용의”	76
북, 핵동결 대가 화력발전소 2기 요구	77
케리 후보, “북 핵무기 과거보다 많을 것으로 의심”	77
미, 한국이 제의한 ‘북핵 3단계 해법’ 수용	77
일 총리, “북, 미와 직접대화 원해”	78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2025년까지 북체제 붕괴” 전망	79
일본 정부후원 연구팀, ‘북, 3년내 핵폭탄 2~4기 제조 가능’	79

1. 대내경제

평양국제상품전 개최

5월 17일 KOTRA는 중국 「신화사」 보도를 인용하여 5월 17일 제7회 평양 국제상품전이 평양 제3대 혁명 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고 보도. 동 상품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태국, 수리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몽고 등 국가에서 총 39개사가 참가했는데 그 중 중국 업체는 18개사로 단둥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KOTRA는 전함. 한편 20일 「연합뉴스」는 2002년(제5차)과 2003년(제6차)의 참가업체가 각각 165개와 110개사였던 점에 비춰 금번 상품전 참가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하면서 특히 2002년 당시에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위스, 호주 등 15개국 업체가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최측인 조선국제전람회 리수덕 사장은 「중앙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북한) 제품들이 전례 없이 많이 출품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 뒤 련하기계합영회사의 각종 숫자조종(수치제어) 공작기계, 평화자동차총회사의 신차, 조선승리합영회사의 각종 윤활유 등을 관심품목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 통신은 남북한 공동투자업체인 평화자동차총회사는 ‘휘파람’ 승용차와 ‘빠꾸기’ 반짐승용차(미니밴) 외에도 신차인 ‘빠꾸기Ⅲ’ 소형화물차를 선보였으며 특히 빠꾸기Ⅲ는 남한의 ‘SUT 무쏘’(무쏘 스포츠)와 같은 픽업형이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통신」은 북한산 중에는 공작기계와 발전기, 다양한 색상의 스텐트, 천연화강석, 천연건강식품 등이, 외국 제품의 경우 다양한 손전화기(휴대전화), 냉온풍설비, 화장품, 신발 등이 각각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KOTRA, 5. 17; 「연합뉴스」, 5. 20).

월간 「조국」, “북, 생필품 생산 품목 및 양 확대”

5월 21일 「연합뉴스」는 월간 「조국」이 6월호 기사를 통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산 경공업제품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공급이 늘면서 시장에서 외국 제품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이 잡지는 ‘평양의 바람 - 이제 외국제품을 밀어낼 것입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외국산 담배와 치약·칫솔은 이미 북한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태라며 앞으로 신발과 의류, 맥주, 포도주 등으로 그 품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와 관련 평양신발공장 김성욱 부기사장은 인터뷰에서 “공장에서 장화 생산량을 늘려 올해 상반기 내로 외국제품을 밀어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원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공장이 활성화되면 연간 8천만 켤

레의 구두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평양 선교편직공장 조성한 지배인도 "올해 하반기에 원료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그러면 더 많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 외국제품을 밀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또한 "공장의 연간 의류 생산량이 700만 벌에 달하며 내수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유럽 등지로 수출한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경공업성 김복만 제1국장은 그 같은 질적 향상과 공급량 확대가 105가지에 달하는 1차 생활필수품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공업성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모든 판매장에 우리 나라(북한) 제품이 가득 차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국』은 전함. 김 국장은 주민들의 의식주와 관련 "먹고 입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2002년 된장, 간장, 기름(식용유) 등을 생산하는 각 도 소재지 기초식품공장 현대화 작업이 완료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콩우유공장(두유공장)'도 각 도와 군에 건설됐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처럼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외국 제품을 밀어내면서 경공업공장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종업원들의 임금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잡지는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편 평양 선교편직공장의 경우 현재 4천(북한)원 선인 종업원의 임금을 3~5배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평양신발공장은 1만(북한)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조국』이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5. 2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개인현금 유통 적절히 통제해야"

5월 21일 『연합뉴스』는 「김일성종합대학학보」(2003. 4호) 글을 인용하여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개인 현금 유통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 김일성종합대학 리원경 교수는 이 학보(철학 경제학편, 2003. 4호)에 발표한 '화폐자원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하의 글에서 "화폐자원의 사회주의적 관리방법의 기본문제인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등 화폐 공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된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리 교수는 현금유통의 국가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주민 화폐수지균형표'를 비롯하여 국가예산계획과 중앙은행의 대출계획 및 현금계획, 기업소의 재정계획, 국가종합재정균형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 특히 개인들이 '국가적 상업망(종합시장, 종합판매소 등)'이 아닌 비공식 시장 등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만큼 주민 화폐수지균형표를 철저히 작성, 개인 현금사용실태를 전국적 범위 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 리 교수는 그러나 "화폐통제사업을 조성된 경제환경에 맞게 좌우경제 편향을 경계하면서 옹기 진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통제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하는 등 ‘막무가내식 통제’를 경계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연합뉴스』, 5. 21).

「워싱턴포스트」, “북, 경제개혁 예상보다 빨라”

5월 24일 『동아일보』는 23일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정부 관계자,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서방 외교관, 기업인, 구호단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도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서방의 예상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각종 인터뷰를 근거로 “경제개혁과 더불어 자본주의 문화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등 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 『워싱턴포스트』는 개성공단 건설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에 주목하며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달러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승진하거나 해고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국영기업을 이윤 추구 기업으로 바꾸고 식량 배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시장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함. 신문은 이에 힘입어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지난해 38% 증가해 10억달러가 됐다고 덧붙임. 아울러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식 소비문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 스페인산 오렌지, 중국산 전자제품 등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시장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나 유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아울러 평양의 휴대전화가 2002년 3,000대에서 현재 2만대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며 인터넷에는 ‘북한산’ 제품을 광고하는 웹사이트도 생겨났다고 이 신문은 전함. 그러나 신문은 북한 방문자들이 최근 도시 주변에 새로운 빈민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자유시장 체제의 도입이 새로운 빈민층을 낳고 있다고 보도. 실제 식량 배급제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임금이 6배 오른긴 했지만 식량 가격은 9배 이상 올랐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이와 관련하여 토니 벤버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담당관은 “북한 주민 2,200만명 가운데 650만명이 올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시장 개혁으로 생겨난 새로운 하층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함. 그는 “어느 사회에서든 경제 개혁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로운 낙오층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하면서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식 자본 흐름이 북한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동아일보』, 5. 24).

북,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하위규정 발표

5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제23호, 제24호, 제25호)으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을 채택(4.29)하였으며 6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등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등 3개 규정은 기업의 경영활동 및 종업원의 노동조건과 외화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8건으로 늘어났다고 전함. 『연합뉴스』는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남측 기업들의 입장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또 노동력은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년 14일간의 정기 휴가,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 종업원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했으며 외화관리규정에서는 자유로운 외화 소지와 반출입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보장키로 했으며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신고만하면 남한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 대상은 전환성 외화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 예금증서,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이리듬 등으로 결정. 이와 함께 광고규정의 경우 광고수단의 종류를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인쇄물 등으로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거나 퇴폐·허위 광고, 생산·판매가 금지된 상품·봉사(서비스)에 대한 광고, 다른 기업·상품·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등은 금지. 또 야외광고물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혁명사적지나 역사유적, 명승지,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시킴으로써 광고의 남발을 방지했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5. 29).

김정일 국방위원장, 구성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

6월 1일 『중앙통신』은 1일 김정일 위원장이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 금번 현지지도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조선인민군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박남기, 주규창,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 대장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김평해 책임비서가 동행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이날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임무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공장에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은 구성공작기계공장이 북한 기계제작공업의 선도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성능이 높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속화, 정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이 공장에서 실리주의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밝히고 사회주의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생산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보도(『중앙통신』, 6.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청천강기계공장 현지지도

6월 3일 『중앙통신』은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청천강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정형’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에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업방법을 따라 배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밝히고 각급 당조직들에서 사상교양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혁명적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이 공장에서는 생산은 물론 사상교양사업, 군중문화사업,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장의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이 통신은 보도(『중앙통신』, 6. 3).

한은, 북 경제성장을 발표

6월 8일 한국은행은 ‘200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를 통해 2003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 1.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남북한간의 경제 규모 차이는 더 벌어졌다고 발표. 한편 북한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국민총소득은 한국 원화 기준으로 21조 9,466억원으로 남한의 3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8분의1)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대구광역시(20조3,000억원) 정도의 경제 규모라고 『조선일보』는 보도. 한편 6월 9일 『연합뉴스』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2% 성장한 것으로 예측돼 식량 및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OEC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 1995년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힘. 또 남북한간 교역은 지난해 7억2,400만달러로 13% 증가했으며, 지

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OECD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동서독 통일보다도 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이 통신은 전함(『한국은행』, 『조선일보』, 6. 8; 『연합뉴스』, 6. 9).

북한의 경제성장률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1.8
(9.0)	(9.2)	(5.4)	(5.5)	(8.3)	(8.9)	(7.0)	(4.7)	(-6.9)	(9.5)	(8.5)	(3.8)	(7.0)	(3.1)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기업소의 창발성 발양 강조

6월 13일 『연합뉴스』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양호 교수가 최근 간행된 이 대학 학보(철학 경제학편, 2004.1)에 발표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제하의 논문을 통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운영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이 논문에 따르면 기업운영의 자율권은 독립채산제 강화와 감가상각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되며 북한은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재 구입에서 생산물 판매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권한을 상당부분 공장·기업소 경영진에 부여했다고 이 통신은 전함. 논문은 “계획 작성과 가격제정, 제품규격화사업, 물자와 생산물 처리 등에서 그전 시기에 비해 많은 권한을 준 것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 논문은 “독립채산제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도록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소가 경영활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특히 독립채산제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요구하면서 개별 근로자와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직장 및 작업반 우대제 원칙에 따라 ‘우대제 상급’ 제도를 도입해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배제했으며 또 공장·기업소에서 과거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감가상각비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국가에 납부

하지 않고 공장·기업소에 '생산확대기금' 형태로 남겨두고 자체 실정에 맞게 생산준비, 대보수, 설비현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하면서 그러나 논문은 기업관리의 '자유화'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기업관리방법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공장·기업소의 자율권을 대폭 제고하기는 하지만 개인 소유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6. 13).

2. 농업 및 식량

WFP 긴급보고서, "북, 100만명 이상에 대한 식량배급 중단"

5월 21일 WFP는 긴급보고서(WFP Emergency Report No. 21 of 2004)를 통해 식량부족으로 인해 5월초이후 약 100만명의 핵심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배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 아울러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없으면 10월까지 약 380만명에 달하는 핵심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배급도 중단될 것으로 WFP는 전망. 취로사업(Food-for-Work) 프로젝트에 의한 곡물지원량도 춘궁기에 계획량 32,000톤에서 8,300톤으로 축소되었다고 WFP는 밝힘. WFP는 향후 6개월간 긴급히 필요한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약 12만7,000톤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WFP는 올해 대북 지원계획을 통해 651만여명에게 48만4,445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1억7,1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WFP는 북한 정부가 룡천역 폭발사고 때 파괴된 1,130개의 가옥의 재건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힘(WFP, 5. 21).

켈리 차관보, "미 대북지원 식량 용도 면밀 검토 중"

6월 4일 『경향신문』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배분되는지 검증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요청한 올해분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켈리 차관보는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 군대가 북한의 (식량을 비롯한) 자원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문제'와 '식량의 대체 가능성' 및 '북한의 선군정책' 등을 거론,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결과적으로 북한군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켈리는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지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북한) 정부와 그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경향신문』, 6. 4).

일 신문, “평양 통일거리시장 곡물가격 급등”

6월 16일 『연합뉴스』는 16일 『도쿄(東京)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평양시 락랑구역에 시범 조성된 통일거리시장의 곡물가격이 작년에 비해 30~60%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도쿄신문』은 최근 현지를 다녀온 사람이 촬영한 시장입구에 설치된 게시판 사진과 함께 게재한 기사에서 ‘백미’는 kg당 240원으로 1년도 못돼 60% 올랐고 옥수수는 30% 올랐으며 돼지고기는 kg당 500~750원으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일반시민의 한달 임금이 2천~3천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밝힘. 게시판에는 시장 ‘리용질서’, ‘시장에서 팔 수 없는 물건’, ‘시장한도가격’이 적혀있으며 팔 수 없는 물건으로는 ▲군용품 ▲기계설비 ▲주파수가 고정되지 않은 라디오 ▲훈장과 메달, 가짜 상품 ▲인민의 기호와 사상감정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표와 그림을 붙인 상품 등이 열거돼 있다고 『도쿄신문』은 밝힘. 통일거리시장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모델로 작년에 개장한 7천㎡ 정도의 옥내시장으로 1천여개의 개인상점이 입주해 있는 시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6. 16).

3. 대외경제

중국 회사, 올해 4개월간 북한에 TV 2만여대 수출

5월 19일 『연합뉴스』는 19일 『흑룡강신문』 인터넷판 기사를 인용하여 중국 장백그룹 심양삼성전자유한회사의 대북 텔레비전 수출이 신장세를 보여 올 들어 4개월간 2만여 대를 수출했다고 보도. 심양삼성전자유한회사는 북한의 조선평양민풍회사와 2년 전부터 거래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회 수출량이 수 십대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북한 내 판매량이 급증, 4월까지 수출량이 이처럼 크게 늘어났다고 『흑룡강신문』은 보도. 또 심양삼성전자유한회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을 북한에 파견했으며 시찰단 책임자는 “조선(북한)은 전망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심양삼성전자유한회사의 전체 수출 가운데 대북 TV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고 신문은 덧붙임(『연합뉴스』, 5. 19).

북한 2003년 대외무역, 최근 10년내 최대

5월 21일 KOTRA는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 9,100만달러로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수출에서는 7억7,700만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6억1,4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8억3,700만달러 적자로 전년의 7억9,000만달러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다고 밝힘. KOTRA는 수출 증가요인은 비금속류 및 수산물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 주요 국가에 대한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 등이며 수입 증가요인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수입 급증, 비금속 및 기계·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밝힘. 한편, 식물제품 및 광물성 생산품, 화공·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서의 섬유제품, 차량, 화공제품 등도 소폭 감소하였다고 KOTRA는 밝힘. KOTRA는 발표를 통해 2003년 북한의 대외 무역 분석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1994년 이래 대외무역 총액이 최고치에 달해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었으며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도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내부 식량난 및 에너지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밝힘(KOTRA, 5. 21).

북, 1/4분기 대남·대일 교역 축소

5월 24일 『연합뉴스』는 통일부 발표를 인용하여 올 1/4분기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1억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7%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87.9% 증가한 7천만달러였고 수입은 1.1% 줄어든 1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 이에 비해 대일 교역규모는 6,100만달러로 16.4% 줄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17.1% 감소한 4,100만달러, 수입은 14.6% 줄어든 2천만달러였다고 통일부는 밝힘. 올 1/4분기 남북교역 규모는 1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7% 줄어들었으며, 이는 경수로 건설공사의 일시중단과 인도적 지원물품의 반출 감소 등 비거래성 교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힘.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통적 대중 및 대일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수산물, 의류, 광물성연료, 광석 등이 올 1~3월에도 수출을 주도했으며, 수입의 경우 식용육류, 광물성연료, 곡물, 전기기기 등 기존의 대중 수입 주종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52.7%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으로부터 담배, 피아노, 컬러TV 수입 증가는 일부 계층의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5. 24).

〈 1~3월중 북한의 대중일 교역 실적 〉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 1~3월			2004. 1~3월			증가율(%)		
	총 액	수 출	수 입	총 액	수 출	수 입	총 액	수 출	수 입
중 국	164	36	128	195	69	126	18.7	87.9	△1.1
일 본	73	50	23	61	41	20	△16.4	△17.1	△14.6
합 계	237	86	151	256	110	146	7.9	27.1	△3.2

통일부 발표자료

북 시찰단, 상하이-선전 특구 방문

5월 26일 『조선일보』는 북한의 경제 시찰단이 개성공단 추진을 앞두고 중국 상하이(上海)의 경제특구 등을 시찰 중이라고 현대아산 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 이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경협 책임자들로 구성된 7~8명의 경제 시찰단이 남측 파트너인 현대아산 임직원들과 함께 25일부터 상하이를 방문중이며, 곧이어 중국 남부 선전특구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시찰 목적이 개성특구 추진에 앞서 중국의 경제특구 운영 상황 등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전함. 북한 시찰단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총회사,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남북경협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현대아산측에서는 심재원 개성공단 담당 부사장 등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조선일보』, 5. 26).

평양주재 외국인에 휴대전화 허용

5월 30일 『한겨레신문』은 29일 『도쿄신문(東京新聞)』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체신부가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 북한은 2002년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명의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이용을 제한해 왔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의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으나, 정보 유출보다 무역 촉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보도. 한편 최근 자신의 명의로 가입신청을 해 새 번호를 받았다는 한 외국인에 따르면 휴대

전화 가입비는 980유로(약 130만원), 통화료는 1분당 거는 데 0.7유로, 받는 데는 0.2유로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한겨레신문」, 5. 30).

일, '북 선박 입항금지법안' 가결

6월 3일 「연합뉴스」는 일본 중의원이 3일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안을 자민, 공명, 민주 등 주요 3당의 찬성다수로 가결시켰다고 보도. 이에 따라 이 법은 참의원 통과절차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내에 성립될 것이 확실해졌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의의 결정만으로 특정국의 선박과 항공기 및 해당국에 기항한 선박의 일본기항을 일정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하면서 일본은 지난 2월 유엔 등의 요청이 없어도 독자적 판단으로 대북송금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환관리법을 개정할 바 있어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이 법에 이은 두 번째 대북 제재법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 이 법은 ▲입항금지조치를 위반한 선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양쪽을 모두 적용할 수도 있으며 ▲국회의결로 입항금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고 ▲국제정세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폐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6. 3).

북, 대중 원자재 수출 급증

6월 3일 「연합뉴스」는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를 인용하여 올 1~4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선철 수출은 1,8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8.3% 늘어나는 등 을 들어 선철과 철광, 무연탄, 원목 등 북한산 원자재의 대(對)중국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이는 지난해 중국으로의 선철 수출 총액인 1,486만달러 보다도 많은 액수이며 고철(철 스크랩) 수출도 920만달러로 작년 1~4월보다 266.6% 증가했고 철광의 경우 621만달러로 무려 1,469.8% 늘어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 이처럼 철강 원자재 수출이 늘어난 것은 중국 내 수요는 물론 북한 내 생산이 증가한 데다 수출단가도 급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 이와 함께 무연탄 수출도 788만달러에 달하면서 162.8% 증가했고 원목 수출도 494만달러로 315.2% 늘었으며 한편 1~4월 전체 대중 수출은 51.0% 증가한 9,918만달러에 달한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6. 3).

EU, 대북의료원조 910만유로 규모 승인

6월 4일 『국민일보』는 유럽연합(EU)이 3일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910만유로(1,110만달러) 규모의 원조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 EU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주의원조국(ECHO)의 연간 예산에서 대북의료 지원자금을 할당했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평양주재 ECHO 연락사무소가 이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힘. ECHO는 지난달 발생한 용천 열차 폭발사고의 구호사업을 위해 20만유로를 이미 지원하고 추가 원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힘. 한편 2001년 이후 EU가 북한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제공한 원조액은 3,800만유로에 달하며 EU는 이번 계획으로 북한 5개도의 1,00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국민일보』, 6. 4).

평양-스위스 제약합영회사 조업

6월 9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스위스 제약회사가 합작, 설립한 평-스(평양-스위스) 합영회사 조업식이 북측의 립경만 무역상, 전현풍 보건성 부상, 백현봉 조선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정호 평양제약공장 지배인 등이, 스위스측에서는 페터 주엘리그 인터퍼시픽 사장, 엑크 하르트 평-스 합영회사 사장, 헬릭스 아브트 북한 주재 인터퍼시픽 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평양제약공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연합뉴스』, 6. 9).

주한 EU대사, “EU기업 개성공단 참여 어려울 것”

6월 11일 『서울신문』은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EU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북핵의 완전한 해체를 원한다”고 밝히고 북한 개성공단에 유럽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시작단계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에 진출해 있는 EU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도. 아울러 북핵 관련 6자회담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진전된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경우 EU도 안보와 경제차원에서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임. 6자회담 결과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보유해서도 안된다고 강조(『서울신문』, 6. 11).

북, 중국과 나노기술 협력 추진

6월 11일 『연합뉴스』는 중국과학기술연구소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승채 과학기술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달 27~30일 중국 과학원의 초청으로 심양 분원을 방문, 나노기술 등의 교류·협력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북한 대표단은 심양자동화연구소 산하 기업체인 신송(新松)사를 찾아 로봇기술 등을 참관했으며 북한 대표단은 2005년 과학자들을 심양에 파견하는 등 북-중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과학원도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먼저 북한 과학원 수산육종과 양식연구소 과학자들을 가까운 시일내 초청키로 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연합뉴스』, 6. 11).

북, 중국 개인에도 투자 권유

6월 12일 『연합뉴스』는 12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역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투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 『요미우리신문』은 안면이 있는 한 북한 당국자가 찾아와 “1천달러라도 좋으니 투자해보시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접근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개인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했다는 경험을 밝힌 한 중국인의 일화를 소개. 또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조선족이 경영하는 민간기업에는 울 들어 북한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자주 걸려와 “거래를 하고 싶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거나 “해산물과 일용잡화 무역을 하고 싶다”는 등의 문의와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북중관계 소식통은 “(2002년 경제개혁에서 제시된) 기업의 독립재산 강화조치가 말단까지 침투하면서 각 기업이 부족한 물자확보와 이익추구에 나선 결과”라고 풀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 작년 북·중 무역은 전년대비 38%나 증가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 중국에서는 최근 북한과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국영기업 ‘조화우련(朝華友聯)문화공사’가 올해 신설되었으며 사실상의 ‘국책’기업으로 보이는 이 공사는 매년 약 3천명 규모의 상업시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며 제1진이 이 달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도 처음으로 100% 외국자본으로 평양에 대형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연합뉴스』, 6. 12).

북, 개도국간 경제협력 강조

6월 18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된 77그룹 창립 40주년 특별 각료회의(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발도상국간 경제협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보도. 최 부상은 77그룹 각료회의 연설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있다면서 “77개 집단(77그룹)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 사이의 단결을 실현하고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남남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최 부상은 이어 개발도상국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선(북한)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6. 18).

평양-단둥 국제여객버스 운행 시작

6월 22일 『중앙통신』은 평양과 중국 단둥 사이의 정기 국제여객버스운행이 시작되었다고 보도. 21일 오전 8시 첫 버스들이 평양의 창광산여관앞에서 단둥으로 출발하였으며 22일부터는 평양에서 단둥으로, 단둥에서 평양으로 동시에 떠나게 된다고 이 통신은 밝힘. 또한 국제여객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며 이 버스의 운행은 조선올림운송합영회사와 단둥중국국제여행사가 맡아한다고 『중앙통신』은 밝힘(『중앙통신』 인터넷판, 6. 22).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북, 남한에 서해유전 개발 요청

5월 19일 『동아일보』는 북한이 서한만(灣) 일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자원을 개발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 왔으며 한반도와 중국 사이 서해 대륙붕의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해 한국과 북한, 중국이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극비 접촉을 했었다고 보도. 18일 산업자원부는 북한 원유공업성이 지난달 한국석유공사에 남포 서쪽의 서한만 석유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 당국자는 “북한이 서한만 탐사를 위해 금강산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해 와 석유공사를 통한 접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함. 회담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서한만 일대는 1997년 북한이 50억~4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곳이며 노르웨이 GGS사가 조광권(租鑛權)을 갖고 있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탐사가 지연돼 오다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 산자부는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은 자제하되 석유공사가 사전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이와 별도로 한국과 북한, 중국의 석유 관련 기관들은 지난달 15, 16일 베이징에서 3자 모임을 갖고 서해의 해저 유전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 이번 모임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후원으로 미 의회 산하 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가 주관해 이뤄졌는데 우드로 윌슨 센터의 쉐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국제전화에서 “황해 유전 개발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의 시각을 갖고 중국과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해 이번 모임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보도(『동아일보』, 5. 19).

통일부, “금강산 관광 3월부터 손익분기점 넘어”

5월 21일 『연합뉴스』는 통일부 발표를 인용하여 금강산 관광객이 올해 3월부터 월 1만5천명을 상회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보도. 통일부는 지난 1월 11일자로 해로관광이 중단됐으나,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1만5,583명에 이어, 4월 1만6,176명에 이르는 등 올 들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전함. 올 3월말 현재 금강산 관광객 수는 총 63만4,480명으로 현대아산은 육로관광 대가로 북측에 1인당 5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금강산에는 현재 펜션과 빌리지를 신축하고 금강산여관을 개보수하는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 1일 1,300명의 관광객 수용이 가능하며, 현대아산은 세계관광기구(WTO)의 금강산 개발계획을 토대로 금호엔지니어링과 협조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임(『연합뉴스』, 5. 21).

남북한 등 6개국 대학, IT 교류협력 세미나 추진

5월 25일 『연합뉴스』는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개국의 대학이 오는 9~10월 북한에서 정보기술(IT) 교류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예정이라고 보도. 25일 포항공대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뉴욕주)이 3년여동안 교류해 온 북한 김책공업종합대

학을 포함해 포항공대, 중국 칭화(靑華)대학,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등과 올 가을에 김책공대에서 'IT에 관한 실용적 연구'란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세미나는 각 대학별로 교수 또는 연구원 2명이 참여해 2주 동안 IT 교류협력과 공동연구를 토론한 뒤 견학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한편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은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토머스 하브린 시라큐스대학 부총장이 세미나 추진상황을 설명했고, 포항공대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김책공대 홍서현 총장이 2002년 10월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포항공대를 방문했을 당시 IT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졌었다"고 설명. 박 총장은 "포항공대는 이미 북한의 다른 대학과 교류 중"이라면서 "앞으로 6개 대학의 IT 기술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6개국 IT 교류협력의 재정 지원은 미국 친한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맡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이의근 경북도지사에게 6개 대학의 IT 교류협정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포항공대에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IT 교류협력을 위해 포항공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5. 25).

인천시, 개성공단에 인천기업 전용단지 추진

6월 4일 『문화일보』는 인천시가 현대아산이 조성중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지(100만평) 내 약 50여만평 부지에 인천 기업체를 위한 전용공단을 4~5년내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 인천시는 이 전용공단 안에 200~300개의 지역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용공단 일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또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일대에 인천·개성 문화교류센터, 남북한 이산 가족 면회소, 대규모 물류보세창고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인천시는 특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강화도 철산리~황해도 개풍군 고도리간 1.4km의 다리가 완공될 경우 개성은 국내 유수의 수출 입가공 단지로서, 인천공항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 중계지로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문화일보』, 6. 4).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6월 5일 『연합뉴스』는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36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15개 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했다고 보도. 입주업체는 시계제

조업체 (주)로만손과 의류업체 (주)신원, 신발제조업체 (주)세종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으며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5개, 서울 4개, 인천과 부산 각 2개, 대구, 경남 각 1개 씩이었으며,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가 8개, 100억~1천억원 6개, 1천억원 이상 1개 등이라고 이 통신은 전함. 토지공사는 기반시설 사용량이 적고 노동집약성이 높으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보도(『연합뉴스』, 6. 5).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마스터플랜 제시

6월 9일 『연합뉴스』는 9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TIC 상영관에서 개최된 개성사랑 포럼 주최 남북관광공동체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산(금강산)과 해안선(동해) 주변에 폭넓게 추진되고, 고성항과 온정리를 양대축으로 한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강산관광 마스터플랜을 현대아산이 밝혔다고 보도.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세계적 관광지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세계관광기구(WTO)에 의뢰해 지난해 9월 현지 실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이 통신은 전하면서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북측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기존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현대아산이 개발추진중인 사업은 고성항 빌리지, 온정각 및 이산가족면회소, 고성항 힐리조트, 고성항 콘도, 고성항 비치호텔, 고성항 워터월드, 온천각, 금강산에코 로지, 고성항 도보코스, 암벽등반코스, 눈썰매장과 스키 및 아이스링크, 직원숙소, 삼일포 별장, 삼일포 골프리조트, 해금강리조트, 동해안 골프리조트 등 총 16개이며 현대아산은 이 가운데 온천각을 비롯한 5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히 고성항과 온정리를 2개의 관광허브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텔과 콘도, 골프장, 민속촌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관광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이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6. 9).

남북, 북 SOC 부족 공감, 해법에는 이견

6월 15일 『연합뉴스』는 6.15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리종혁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남북경협을 주제로 한 원탁토론에 참석해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당국선에서의 조건과 환경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남한 당국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남북 양측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미비가 경협의 걸림돌이라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활

성화를 위한 방법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임. 리 부위원장은 “경제 하부 구조 조성분야에서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전력, 철도, 도로 분야에서 협력은 현시기 대부분 소규모적인 단순한 물자거래나 위탁가공수준과 같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서 관건적 고리이고 조선반도를 물류중심지로 꾸리는 전략의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 이날 원탁토론에 참석한 박홍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측의) 인프라 부족 등이 사업추진에 애로를 주고 있다”며 “전력, 통신, 항만, 교통,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 장지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개성공단 조기 조성과 중소기업의 조기 입주를 강조하면서 “남북간 철도, 도로를 조기에 연결해 직교역과 물류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해결책으로 북한의 리 부위원장은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측 당국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당국선에서의 조건과 환경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유관국의 방조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 북남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반면 박홍렬 국장은 “사업 상대방이 시장경제 마인드 부족으로 사업착수단계나 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편을 감당하길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업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힘. 박 국장은 “국제사회의 전략물자수출통제상의 비확산체제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제약이 있다”며 “전략물자의 반출입 제약으로 제품 생산이 어렵고 원산지 문제로 해외판로개척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국제관계 개선을 강조. 장지중 회장은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보장, 신변보장 등 남북간에 합의된 법과 제도가 준수되어야 하며 미비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힘(『연합뉴스』, 6. 15).

통일부, 1~5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6월 18일 통일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5월중 남북교역액이 256,165천달러로 전년동기 209,390천달러 대비 22.3% 증가했으며 반입 99,453천달러, 반출 156,712천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295개(위탁가공업체 83개)이며, 품목수는 442개(위탁가공교역 품목 143개)로 발표.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이며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으로 밝힘. 통일부는 1~5월중 남북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22.3% 증가한 주요 요인은 상업적거래·위탁가공교역 등 거래성교역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거래성교역 중 비

료, 용천구호물자 등 인도 물자 지원과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통일부, 『보도참고자료』, 6. 18).

1~5월중 남북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거래성 교역	126,085 (+7.0%)	상업적 매매거래	71,769 (+12.7%)	반입	65,267
				반출	6,502
		위탁가공 교역	54,316 (+0.3%)	반입	34,186
				반출	20,130
비거래성 교역	130,080 (+42.1%)	협력사업용 교역	15,057 (-36.4%)	반입	-
				반출	-
		대북지원	115,023 (+69.5%)	반입	-
				반출	115,023

1.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2. 협력사업용 교역은 경수로사업 물자 164천달러, 금강산관광사업 물자 10,538천달러, 기타 협력사업 물자 4,355천달러
3. 순수 인도지원물자 100,211천달러(대북 비료지원 31,252천달러, 용천 열차 사고 구호물자 41,873천달러, 기타 지원물자 27,086천달러),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 자재·장비 차관 제공 14,812천달러

5.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5월 27일 통일부는 5월 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비롯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쌍방의 입장을 교환하였다고 발표. 남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성급군사회담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밝힘.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방안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경비함정간 공용주

파수 설정·운영 ③경비합정간 시각신호 제정·활용 ④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안하였다고 통일부는 밝힘. 북측은 쌍방 군부가 6.15공동선언과 군사합의 이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측은 절박한 과제로서 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부터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통일부, 5. 27).

통일부 장관, “북일 관계 개선 기대”

5월 27일 『한겨레신문』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이 재개되면 핵문제 해결에 바람직하고 경수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인 만큼 북일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정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뤄진 주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남북관계 못지 않게 북일관계가 중요하다”며 “물론 북미관계가 핵심이지만 산이 높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어 용천 참사 지원 현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비롯한 한적 창구를 통한 지원은 2,200만여달러, 국내 민간단체 지원은 2천만달러 등 모두 4,200만~4,300만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분 675만2천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라고 밝힘(『한겨레신문』, 5. 27).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책 합의

6월 5일 『동아일보』는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내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상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고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각종 선전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선전활동 장비 및 수단들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남북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 군함의 철저한 통제 ▲상대방 민간 선박 및 군함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남북 군함간의 국제상선공통주파수 사용 ▲깃발 불빛 등 시각적 신호체계 제정 ▲제3국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남북정상회담 4주년인 15일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 또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해 설치된 기존의 남북한 직통전화와 별도로 8월 15일까지 각자 지역 내에 군(軍) 직통전화를 가진 통신연락소를 세우고 이를 위해 기존 경의선 지역의 남북 통신 회선을 증설 또는 연장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와 함께 남북은 MDL 인근에서 방송 게시물 전단 등을 이용해 실시해 온 선전활동을 15일부터 전면 중지키로 하고 16일부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전광판 입간판 확성기 등 양측 선전 수단

들을 3단계로 나눠 8월 15일까지 모두 없앨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동아일보』, 6.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6월 5일 통일부는 남북이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고 ▲개성공단 건설은 6월말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구성,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 생산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개통, 철도는 금년 10월 시험 운행 실시, 내년말 개통 추진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경협 제도적 장치 확충 ▲경협 애로사항 시정·해소 ▲쌀 차관 제공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발표. 한편 금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 각각 7개 항구간 항로를 개설하며,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 선박에 부여하고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통일부는 발표(통일부, 6. 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터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 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6. 북한·주변국가 관계

북일 정상회담 개최

5월 22일 『한겨레신문』은 북한과 일본이 22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난 2002년 9월 ‘평양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교정상화의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을 갖췄는데 정상간 합의했으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가족 8명 가운데 본인이 귀국을 희망한 5명이 이날 바로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보도.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정상회담 개요를 보도하였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선언 이행과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일 평양선언이 양국관계의 기초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가족귀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하스이케 가오루씨 부부의 장녀 등 5명이 귀국하지만 납치피해자인 소가 히토미씨의 남편으로 주한미군 근무 당시 탈영한 미국인 켄킨스씨와 그의 딸 2명의 경우, 김 국방위원장이 “켄킨스씨의 판단에 맡기겠다. 가족은 이산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에 가기 싫다면 베이징이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밝힘. 아울러 피랍 의혹자 처리와 관련하여 일북측이 참여한 가운데 곧바로 본격적인 재조사를 하도록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동의를 얻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밝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핵의 전면포기는 불가피하며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밝혔으며 김 위원장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다. 6자협의를 활용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의 동결을 재확인했으며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대북 경제) 제재조치의 발동을 하지 않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밝힘. 한편 일본은 국제기구를 통해 25만톤의 식량, 1천만달러 어치의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귀국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이즈미 총리는 밝힘(『한겨레신문』, 5. 22).

북, 대리비아 UF6 판매 부인

5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29일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22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대리비아 육불화우라늄(UF6) 판매 기사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는 미국의 정치적 모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중앙통신』은 ‘육불화우라늄 판매설은 추악한 음모’ 제하의 논평에서 “우리와 리비아 사이에는 농축 우라늄 분야에서 그 어떤 거래도 없다”며 “미국의 육불화우라늄 밀매설은 근거

없는 날조품으로 우리에게 핵물질 전파자의 딱지를 붙이려는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 『중앙통신』은 미국이 제2차 6자회담과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핵폐기(CVID)’에 의한 선택 포기 주장이 배격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이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를 강박하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또 미국이 육불화우라늄 밀매설을 유포, 차기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 계획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제압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 신봉길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리비아측은 육불화우라늄(UF6)을 핵 암시장에서 획득했다고 밝혔으며, IAEA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힌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밝힘(『연합뉴스』, 5. 29).

미 민주당 케리 상원의원, “북한과 감군 및 통일 직접대화 용의”

5월 31일 『동아일보』는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북미 양자 협상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감군 문제와 정전협정의 대체 문제는 물론 남북한 통일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케리 의원은 28일 밤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다룰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 케리 의원이 북미 양자회담 의제로 예시한 ‘한반도 감군’은 남북한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의미하고 ‘정전협정의 대체’는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덧붙임. 인터뷰에서 케리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한 실패를 감추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하다며 “나는 6자회담을 하면서도 양자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 케리 의원은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나의 외교정책 참모진은 김정일이 면전에서 속이고, 돌아서선 말썽을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보다 관계를 맺고 개입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힘(『동아일보』, 5. 31).

북, 핵동결 대가 화력발전소 2기 요구

6월 1일 『동아일보』는 1일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서 핵 동결의 대가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2기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도. 미국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한국 러시아 일본 등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영변(寧邊) 핵시설을 동결할 뜻을 밝히면서 다음 단계로 경수로 건설사업의 재개 외에 화력발전소 제공을 요구했다는 것. 미국은 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라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경수로 공사 중단으로 참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한국과 일본은 이 제안이 검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해진다 는 점에서 찬성해 3차 6자회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동아일보』, 6. 1).

케리 후보, “북 핵무기 과거보다 많을 것으로 의심”

6월 4일 『경향신문』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 2일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핵무기(even more nuclear bombs now than it did before)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보도. 케리 의원은 이날 AP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성공해 북한의 원자로에 사찰단을 보내고 TV카메라를 부착했지만 지금은 사찰단과 카메라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북한은 과거보다 더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진정한 논의’를 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성공했다라면 북한의 핵 의도를 규명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그는 이제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 핵 대화를 가질 때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경향신문』, 6. 4).

미, 한국이 제의한 ‘북핵 3단계 해법’ 수용

6월 7일 『서울신문』은 미국이 북핵 동결 후 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3단계 해결방안’에 찬성하며 북핵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익명을 전제로 한 한국 특파원

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난 2월 제시한 북핵 3단계 해법은 매우 합리적인 전진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북핵의 동결상태는 단기간으로 끝나야 하지만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시동걸기(jump-start)’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한 분위기 속에서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유인 카드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한국은 앞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포괄적 동결을 시작한 뒤 국제적인 검증과정이 시작되면 일부 국가가 북한에 일시적 에너지를 지원하고 미국은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으나 반면 미국은 그간 ‘북한의 선(先) 핵 포기 후 안보 및 경제우려를 해소한다’는 큰 그림을 갖고, 6자회담 등을 통해 우선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원칙을 받아들일도록 촉구해 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미국측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과 관련, “유엔에 갈 계획이 없으며 6자회담이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일축했으나 대북 안전보장과 일시적 에너지 지원에 의회와 일부 인사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의 반대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서울신문』, 6. 7).

일 총리, “북, 미와 직접대화 원해”

6월 8일 『서울신문』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7일 G8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일부 외국 언론들과 회견하면서 “내가 보기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미국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국가 정상들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일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한 경험이 있다며, 그가 북한과 1대1 대화를 가진 것은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루려는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시도였다고 밝힘. 그는 지난달 22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진 사실을 언급, “김 위원장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힘.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전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낙관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서울신문』, 6. 8).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2025년까지 북체제 붕괴” 전망

6월 10일 『동아일보』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국이 보는 한국 및 중국 경제의 미래와 향후 대북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북한 관련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때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고 보도. 군사전략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베넷 박사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면서 “후계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으면 북한 내 각 분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 무력 충돌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이는 남한과 미국 모두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 난민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며 난민 속에 섞인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한에 범죄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해외에 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주한미군 감축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패배를 희망하고 있는 북한은 11월까지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동아일보』, 6. 10).

일본 정부후원 연구팀, “북, 3년내 핵폭탄 2~4기 제조 가능”

6월 16일 『세계일보』는 일본의 정부후원하의 한 연구팀에서 북한이 앞으로 3년 내 핵폭탄 2~4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팀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 컨소시엄 우렌코사(社)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할 것을 전제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제조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힘. 일본에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 결과 북한이 우라늄 원료를 확보하고 농축 시설을 풀가동 할 경우 핵무기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편 『세계일보』는 미국은 북한이 2005년 초까지 2~4기의 우라늄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육불화우라늄(UF6) 17톤을 확보해 2,7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3년 내 순도 90%의 고농축 우라늄 235.60g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세계일보』, 6. 16).